

한국전쟁사상의 전쟁 기록과 해석의 양상

— 임란과 호란, 그리고 6·25전쟁을 중심으로 —

白 奇 寅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리말
2. 왜란의 전쟁체험과 기억
3. 호란의 전쟁체험과 기억강화
4. '6·25전쟁'의 반추와 전망
5. 결론 — 세 전쟁의 전쟁사적 의의

1. 머리말

전쟁은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으로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악과 무관하지 않으나 그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불가분 사회악과 관계를 가진다. 전쟁은 속성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양가적인 산물로 이해되며, 그러기에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은 인류역사상 문명의 변화에 직접적인 동인으로서 존재해왔다. 전쟁은 개인적인 호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과 깊이 관련되었고, 집단적인 인간 삶의 형태가 계속되는 한 결코 현실에서 떼놓을 수 없는 ‘삼쌍둥이’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¹⁾ 그것은 한 나라의 국력이나 한 시대 최고의 과학기술과 고도의 각종 지식을 동원한다. 전쟁은 필요에 의한 발명을 낳고, 그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 새롭게 디자인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전쟁을 경험한 모든 세대는 나름대로 기록을 유지해왔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정한 전쟁의 기억을 생성시켰다.²⁾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쟁의 기억은 여러 형태로 그 실상을 드러내게 되고, 동시에 전쟁에 대한 의미와 평가가 부여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쟁은 시·공간적으로 당대의 체험자들과 후대에 이를 조명하는 이들간에 야기되는 불가피한 거리와 낙차에 의해서 더욱 다양한 인간의 이야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전쟁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며, 나아가 그러한 전쟁의 기억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회적인 양상에 대하여 한국사의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공행상을 비롯한 전후처리, 공간 기록물 편찬 및 사적 기록물의 생성, 전쟁 기념 및 기억, 체험 당사자의 아나바시스와 전쟁평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전쟁에 대한 정신적 공간의 형성, 즉 전쟁문학이라는 전쟁의 기억과 영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사상 왜란, 호란, 그리고 6·25전쟁을 통시적으로

1) 허남성, 『전쟁과 문명』(안보과정 참고교재), 국방대학교, 2005, p. 3.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 전국역사학대회(2003. 5. 31)에서는 “한국사상 전쟁기억과 기억전쟁”이란 제목하에 사회사적 접근을 통해 전쟁이 일반민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전쟁의 기억 형성, 유지, 관리라는 관점에서 전쟁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와 현실』 제51호(한국역사연구회, 2004. 3)를 참조.

연결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2. 왜란의 전쟁체험과 기억

(1) 왜란, 투사에 의한 강요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 4월부터 동왕 31년(1598) 11월 종전까지 약 7년간에 걸친 장기전이었다. 이 전쟁에서 초전 2개월과 정유재란 당시의 한때를 제외하고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하여 우세를 점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저지한 후 전선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종적으로 일본군은 강화를 추진하다가 조선군에 봉쇄된 채 가까스로 퇴각에 생사를 걸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임란은 조선군의 패배가 아니라 일본군의 패배고 조선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³⁾

이러한 평가는 전선의 상황이 이미 개전일인 4월 13일로부터 3개월째에 접어들 무렵인 7월 8일 웅치·이치전투에서 권율 지휘하에 조선군의 공세적 방어로 왜군의 호남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진격과 보급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상해야 했던 것이 일본군의 입장이었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⁴⁾ 반면에 조선군은 왜군의 취약점을 전세의 반전을 위한 계기로

3) 임진왜란의 戰局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아측의 승리 왜측의 패배'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병주, 「임란과 호란」, 『한국의 군인정신』, 삼화출판사, 1978, p. 103; 허선도, 「임진왜란론-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pp. 542~550). 그러나 어디까지나 허선도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임란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있어서 순국사관이나 영웅사관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은 아니다. 왜란을 맞이하여 이를 처리하는 국정운영의 전반에 문제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지도 또는 전쟁수행과 관련한 제반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4) 박재광, 「임란 초기전투에서 관군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충장공 권율도원수 서거 400주년 학술회의 논문집), 전쟁기념관, 1999, pp. 89~99.

삼았고, 특히 전라도를 조선의 지상군이나 수군의 군사 및 군량의 공급처로 활용하였다.⁵⁾ 이로 인해 결국 왜군은 해상에서의 이순신의 활약과 권을 휘하의 지상군에 의한 지연 및 합동작전, 그리고 명의 파병에 의한 연합전력 등 반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조선에 빼앗기면서 중국에는 겨우 퇴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궁지에 몰렸던 것이다.⁶⁾

그러나 당시 전란으로 인한 조선사회의 피해는 참혹한 것이었다. 일본군의 조선에 대한 직접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전선이 확장되고, 명군이 조선에 파병됨으로써 이미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 사실 전쟁의 배경에는 일본에서 통일정권을 형성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그의 과도적인 연합정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이묘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전개한 대규모의 해외 원정사업으로 일종의 ‘정치적 투사’였다.⁷⁾ 바꾸어 말하면, 대내적으로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전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침공결과는 전쟁 주도자인 토요토미가 사망하자 일본 정국이 전공파와 관료파의 대결 속에서 결국 전란에 참전하지 않은 토쿠가와가 실권을 장악하는 정치적 계기로 작용했을 뿐이다.⁸⁾

5)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pp. 72~163.

6) 서인한, 『임진왜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 239~243; 한명기, 「정유재란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전략전술』(이순신 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학술회의), 1998, pp. 97~113.

7) 전쟁의 유형을 투사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은 결국 국내-국외정치간의 상호연계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연계정치(linkage politics)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대외행위에 대한 내부영향’의 관점에서 분석-설명-정리하는 국제관계이론을 연계이론(linkage theory)이라 하는데, 로저나우(James. N. Rosenau)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는 1950년 후반부터 국가간의 갈등·분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내갈등·분쟁과의 연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면서 국가-국제체제간의 분석으로서 갈등현상을 중심으로 국가의 내부갈등과 대외갈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방법론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우, 「로즈노우의 연계이론」,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99(三訂版), pp. 361~389를 참조.

8) 서인한, 『임진왜란사』, pp. 276~278.

전쟁의 원인이나 배경의 측면에서 볼 때, 이렇듯 임란은 일본이 대내적인 문제를 대외적으로 투사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고, 그 장기화로 자국 정권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정치질서의 변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대내적인 응집력을 증대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사회적인 위기와 국력의 약화 및 민생의 피폐로 대륙정세의 변화에 따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쟁의 와중에 강경파로서 의병활동의 성과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한 북인정권(1608~1623)은 결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민생문제에다 조선에서의 전란을 틈타 만주에서 흥기한 여진과의 힘겨운 외교관계 속에서 결국 순수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어긋나는 정치행태를 보였고, 결국 폐모살제라는 강상윤리의 폐기로 명분을 잃고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⁹⁾ 반정으로 성립된 약체의 인조 정권은 호란의 위기에서 결국 좌초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은 의병들의 활약이나 이순신 장군이 주도하는 해전의 전략전술적인 성과가 전란 극복의 주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참전은 그 영향력을 약화시켰다.¹⁰⁾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대명외교에 의한 연합적인 전쟁수행의 전략적 우세였다는 점에서 결국 전후의 대외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 명군의 참전은 이념적으로 조선의 종주국으로서 춘추대의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자국을 전장화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구상에 토대를 둔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같은 목적이 우선시되었던 명군의 파병은 평양성 전투 이후로는 일본군과의 결전에서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남겼다.

특히, 명은 일본과 강화협상을 시작하면서 조선을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화 논의 이후 명군은 일본군과의 교전을 포기하고, 조선군에게 그것

9)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p. 13.

10) 임란시의 전략전술에 대해서는 이장희·장학근, 「왜군 격퇴의 전략·전술」,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pp. 177~208을 참조.

을 강요함에 따라서 조선은 독자적인 군사작전권을 상실한 처지였다. 게다가 명군은 전투에서는 소극적이면서도 장기주둔에 들어가 조선으로서는 군량과 군수물자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과 그로 인한 민폐 등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¹¹⁾

임란이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그 충격의 여파는 조선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 여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명의 파병이 신종(1573~1619)의 정치적 부패와 방탕으로 국고가 탕진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것 역시 본질적으로 명의 내부문제의 외부로의 투사였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명은 내부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대외로 돌릴 수 있었으나, 결국 국가재정의 피폐와 악화는 물론 전국 전역에서 일어난 민란을 가속화시켜 임란직후 64년만에 북방의 여진족에게 패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조명 쇠퇴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란은 일본이나 중국 양국간의 대내적인 요인의 대외적인 투사가 중간지역(rimland)인 한반도에서 상호충돌로 나타난 전쟁이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해양세력(sea power)의 투사에 대응한 대륙세력(land power)의 대응력간의 파열현상이었다.

(2) 기억과 평가, 그리고 현창

임진왜란은 난국의 타개와 초전을 제외한 전쟁 기간 전체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점에서 승리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왕인 선조가 내린 교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의 원인이 결코 국정운영상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조선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연릉부원군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이 쓴 경상도 토민들에게 보낸 선조 교지의 일부이다.

1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2, pp. 49~68.

“내가 즉위한 이래로 이제 25년이 되었다. 비록 인덕이 백성에 미치지 못하여 혜택이 아래로 스며지지 않고, 지혜가 만물을 살피지 못하여 정치가 많이 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본심만은 어디까지나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자는 것으로 염원을 삼아 왔던 것이다. 다만, 근년에 변정에 혼란이 많고 군정이 헤이하여 진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성은 높고 못은 깊으며 병갑이 예리하므로 가히 침략하여 오는 도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외에 신칙하여 감독을 더욱 엄하게 하여 왔던 것인데 시로 성이 높아 갈수록 국세는 날로 약화되고 못이 더욱 깊어갈수록 백성들의 원망은 날로 깊어가서 이렇게 쉽사리 허물어질 줄은 생각도 못하였던 것이다.”¹²⁾

이 같이 국왕 스스로의 실책에 대한 자책감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고와 일본군에 의한 남녀노소를 막론한 무차별적인 노략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본군에 의한 노략은 서양 노예상과 연계되었던 것으로 사실상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임진년의 전화를 서애 유성룡은 한 마디로 “참혹했다”고 표현하고, 『징비록』에서 그 전후를 기록하여 전란의 발단과 경과를 고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¹³⁾

전쟁기간 중에 일본군이 조선에서 자행한 참상은 그 단편적인 실상이 일부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되어 전한다. 임란시보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노략이 더욱 심각했다. 일본군의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을 띤 만행이 그만큼 증대되었고, 그들의 논공

12) 이노, 『龍蛇日記』, 『敎慶尙道土民等書』 “廿五年于茲矣 雖仁不及民 而澤不下究 智不察物 而政多失措 乃素心則未嘗不以愛民 恤物爲念 第見近年 邊徼多釁 而軍政廢弛 顧乃域池之高深 兵甲之犀利 可禦冠盜 申勅中外 嚴加程督 實不料城益高 而國勢日卑 池益濶 而民怨日深 桑落瓦解 一至於此.”; 오희문, 『瓊美錄』 卷一, 『壬辰南行日錄』 壬辰四月廿五日條에 실려 있는 中外大小 臣僚·閑良·耆老·軍民 들에게 내린 宣祖敎書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13) 유성룡, 『懲愆錄』, 『自序』 “懲愆錄者何 記亂後事也. 其在亂前者 往往亦記 所以本其始也. 嗚呼. 壬辰之禍慘矣.”

대상이 조선인 살육자 수에 근거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경남(趙慶南)의 『난중잡록』이 전하듯 일본군이 수급 대신 코를 베어 1되 단위로 소금에 절여 일본 본토로 보냈던 사정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고, 강항(姜沆)의 실기인 『간양록』에서도 확인된다. 왜군이 자행한 광적인 인명 살육과 노략의 만행에 대한 참상은 일본 승려인 경염(慶念)의 『조선일일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조선인들은 전란의 충격에 놀라면서도 의연하게 저항의지를 발양하고 있었다.

“하물며 난리를 치를 곳은 부모가 모두 죽었고 처자가 포로로 잡혀 가고 온 집이 불에 타버려서 대로 내려오던 생업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천지 사이에 원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만일 미리 막지 못하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힘을 다하여 보복하려 하는데 ……”¹⁵⁾

전쟁 체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억 또한 다양했다. 우선 임란 당시의 전쟁포로와 관련된 문제를 보자. 어떤 전쟁이고 의례 전쟁에서는 포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왜란시 일본군의 조선인 포로 획득은 참전 왜장의 각변에서 추진하는 사업진흥을 위해서 토요토미가 사전에 직접 계획한 것이었고, 주로 조선의 선진 기술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러기에 전후에 조선인 포로송환문제는 최대의 관심사였다. 1607년 정월에 왜란이 종결된 지 10년이 지나 강화를 위해 조선의 사절단이 막부에 파견되었을 때 통신사의 명칭을 ‘회담겸쇄환사’로 결정한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그러나 통신사의 방문을 비롯하여 일본과의 수교로 피로인의 송환이 본격 추진되었지만 종전

14) 강성문, 「한국 역사상 포로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사의 재조명』, 황금알, 2005, p. 117.

15) 오희문, 『瓊美錄』 卷一, 「壬辰南行日錄」 永同人通文條. “況經亂之地, 父母俱死, 妻子被擄, 舉家焚蕩, 世業一空, 天地間怨讐無大於是, 痛哭痛哭, 若不豫防, 後悔無及, 欲與同志者, 戮力報復.”

후 40여년이 지나도록 공식 쇠환자는 수교복구 이전의 5,700명을 포함하여 7,500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피로인이 10만명으로 추산되던 상황에서 보면 포로 중 1/10에 해당하는 극히 소수의 인원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⁶⁾

일반적으로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같은 의식은 임란 이후에도 일본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앞서 내적인 적개심과 문화적 우월감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한 조선인 지식인들의 일본인식은 포로송환문제를 논의해야 했던 통신사의 의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조선후기 내내 문화적 화이관으로 존재했다.¹⁷⁾ 임란 후 통신사들의 우월의식은 전쟁의 기억에 의한 대외관계의 관념, 곧 전쟁 직후의 대일관 형성에 그대로 투영된 실상을 드러냈던 것이다.¹⁸⁾

그런데, 전후 전쟁에 대한 평가와 전후처리과정에서 논쟁상문제가 명의 참전문제와 결부되어 정치적인 해석의 대상이었음은 매우 흥미롭다. 앞서 선조의 교지에서 국왕 스스로가 전란에 대한 자책감을 피력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그 자책감을 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계시켜 선조는 전승의 요인을 명군의 참전에서 찾고 있었다. 선조의 시각은 전쟁 초기에 전쟁지도에 실패한 자신과 조정의 책임을 만회하려는 입장

16) 임란시의 포로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당시 정유년에 포로가 되었던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에 의하면 3~4만명의 곱절인 6~8만명의 노약자와 여자를 합해 9~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한다. 이러한 견해 외에도 일본의 內藤雋輔는 그의 연구논문에서 5~6만명으로 추산하였다(강성문, 『한국 역사상 포로송환에 관한 연구』, p. 118).

17) 이러한 조선지식인들의 대일관은 정유재란시 일본군에 납치되어 일본 본토에서 피수생활을 했던 鄭希得(鄭希得)의 『해상록』은 물론, 통신사들의 일본방문기 등을 통해서 보면 1811년 대마도에서 국서교환을 마지막으로 통신사행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일본에 대한 인식으로 존재했다. 예컨대, 1719년 통신사행의 재물관이었던 신유한의 『해유록』은 그러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 같은 조선 지식인들의 대일관은 일종의 문화적 화이관으로서 심지어 당시 개명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학자인 다산의 초기 일본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8) 조선후기의 대일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연구』, 일지사, 1989를 참조.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¹⁹⁾ ‘재조지은’을 강조하면 할수록 명군의 원병의 주체가 자신들이고 이를 통해 전쟁 초반의 연이은 패배와 파천으로 인한 실추된 권위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한 의식은 전란과 관련한 신하나 순절자 등을 획정하고 녹훈하는 것이 전후 복구작업의 일환이자 동시에 전란수습책의 다름이 아니었다. 실제로 전후 녹훈작업은 조정에서 전란의 복구작업과 함께 사회적인 일탈현상으로 흔들리는 조선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전공을 세운 신하나 순절자의 획정과 이들을 공신으로 녹훈하는 과정에서 누가 전란의 주된 공로자인가를 놓고 다양한 문제가 분출되었다. 당시 다수의 유공 무장들이 전사하여 공신 녹훈을 주관할 신하인 원훈이 존재하지 않았다. 장수들의 전공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장계나 소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²⁰⁾ 게다가 전쟁 극복의 주된 요인을 명의 원군에서 찾고 조선 장수들의 전공은 해상의 이순신과 원군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것이 당시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입장이었다. 특히, 명군은 전쟁극복의 주력으로 보아 가장 큰 공이 선조를 호종하고 명에 구원을 요청한 신하라는 선조의 시각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전후 녹훈문제가 전승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과 결부되면서 정치적인 해석과 연계되어진 점은 집권층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고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이나 권을 같은 ‘구국의 영웅’이나 재야의 의병장들이 했던 역할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전후 ‘재조지은’이 강조되면서 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선에 참전했던 장관들의 공로를 현창

1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2, p. 80. 선조나 재조관료들이 명군을 원훈으로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그들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今此平賊之事 專由天兵 我國將士 不過或隨從天兵之後 或幸得零賊之頭而已 未嘗馘一賊酋 陷一賊陣 其中如李元二將海上之慶 權慄幸州之捷 差強表表”(『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奎 14924), 萬曆 29年 3월 13일조. “領議政李恒福啓曰… 當爲元勳天兵之所以至此者.”(『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萬曆 29年 5월 3일조).

20) 노영구,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역사와 현실』 제51호, 2004, pp. 14~17.

하는 사업들이 전개된다. 그만큼 전후 임란에 대한 선조를 비롯한 조정의 입장은 전쟁과 연이은 패전 그리고 몽진 등으로 이어진 전화의 책임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소중화의식을 갖고 명과의 문화적 동질성과 맹방으로서 관계를 중시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²¹⁾

그러나 임란 당시의 아나바시스(Anabasis),²²⁾ 즉 전쟁 참가자들의 회고록 등을 통해서 보면 명과의 연합전력의 유지 및 관리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난중일기(亂中日記)』나 『징비록(懲毖錄)』 또는 후대의 기록이지만 임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나 다산의 『비어고(備禦考)』 등의 기록에서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당시 명군의 군사적인 가치는 지휘체계로나 전투의지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했고, 오히려 명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회의적인 성격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공을 둘러싼 전쟁 평가는 17세기 이후에 의병 중심의 전쟁기억을 형성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평양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이여송 송덕비를 세우고 ‘재조지은’을 기억하며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숙종대에는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을 세워 명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²³⁾ 상대적으로 관군의 활동, 특히 수군의 활약 등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17세기 전반기에 임란을 다룬 대표적인 전쟁문학이라고 할 『임진록』의 서술 역시 그 같은 전쟁의 기억과 평가에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2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 82.

22) 역사적으로 아나바시스의 기원은 크세노폰(Xenophon)의 ‘아나바시스’나 ‘갈리아전기’가 될 것이다. 아나바시스는 그리스어로 ‘올라가기’를 뜻하는 말로 전쟁체험을 기록한 기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크세노폰, 천병희 역, 『아나바시스』,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을 참조.

23)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pp. 82~88.

24) 임진록에 관한 연구로는 최문정, 『임진록 연구』, 박이정, 2001을 참조.

그러한 대명의리나 존주론적인 입장에서 현창사업은 정조대까지도 계속 되었고, 임란 후 호란을 치르면서 양란의 후유증 극복이란 측면에서 더욱 견실하게 되었다. 명에 대한 ‘재조지은’에 대한 기억과 그에 따른 현창은 호란 후 더욱 분명하게 두 계열, 즉 주자학 계열과 실학 계열의 화이관으로 분화된 조선후기의 대의의식과 깊이 연계되었던 것이다.²⁵⁾

3. 호란의 전쟁체험과 기억강화

(1) 전쟁 상처의 반복

두 차례의 호란은 청을 세운 여진이 명의 국운이 기우는 것을 감지하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명의 동맹국인 조선을 선제공격한 전쟁이었다. 호란은 여타 북방민족의 동진정책과는 달리 그들의 대륙지배 직전에 조선에 침입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여진족의 조선 침공은 영토를 점령하여 그들 제국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데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을 그들의 세력권 안에 넣어 자신의 우방국으로 고착시켜 배후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 대륙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⁶⁾

역사상 호란은 고려 시대 이후 국왕이 출성하여 항복한 최초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다. 나·당 연합군의 침공에서 패퇴한 백제나 고구려가 국왕의 출성 항복과 함께 왕조의 최후를 맞았던 것과 달리 조선은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예를 올렸지만 그것이 왕조의 최후는 아니었

25) 조성음, 「조선후기 화이관의 변화」,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한국사연구회, 1993, p. 140.

26) 유재성, 『병자호란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pp. 273.

다. 남한산성에 포로가 된 채 50여일간 항전하던 조선의 조정은 추후 대응을 놓고 척화와 주화로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현실적인 주화를 채택하며 청에 항복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외교적인 선택이었다.

인조의 출성 항복이 있는 바로 다음날 양국의 군은 대치상태를 풀고 철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애초부터 호란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우선 조선군은 훈련정도나 병기의 질이 청군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고, 양차의 전란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전쟁의 발발의 위험성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전쟁에 대비할 자원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패배는 정치와 군사적인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통치력의 이완과 더불어 문관의 군사지휘로 인한 지휘능력의 결여가 큰 원인이었다. 즉, 수령의 대부분을 문관 출신으로 임용함으로써 유사시 실제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식적인 북방방어개념과 전술적인 다양성의 결여 및 산성중심의 방어전략으로 인한 청야작전의 실패, 그리고 대명외교의 한계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도 문제였다. 특히, 조선군이 포수·사수·살수의 세 병종에 의한 삼수병체제를 개발했지만, 이는 대외방어용이었지 북방의 호적방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²⁷⁾

그런데, 선조대에 항왜전법(抗倭戰法)으로 채용한 명의 척계광이 저술한 『기효신서』의 전법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명·청교체기라는 대륙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조선의 방어체계에 적합한 병법의 필요성이 제고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는 일단 후금의 발흥에 대응하는 이른바 ‘방호대법(防胡大法)’인 『연병실기(鍊兵實紀)』의 도입으로 나타났다.²⁸⁾ 그러나 호란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같은 척법의 문제

27) 유재성, 『병자호란사』, pp. 298~303.

28) 『宣祖實錄』 卷182, 宣祖 37年 12月 辛酉條. “鍊兵實紀, 則實是防胡大法. 車載火器, 阻截虜馬, 又以騎步載在車陣之內. 俟其敗北飛追磨殺, 此其大略也.”

집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는 성과가 없었다. 조선사회에서는 현종과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기효신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²⁹⁾ 그리고 마침내 영·정조대 ‘도성수비체제’의 강화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조선적 병법 체계가 완성되었던 것이다.³⁰⁾ 조선무예에 18기가 정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영조 35년(1759)에 『무예신보』의 편찬과³¹⁾ 정조 13년(1789)에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된 것이 그 증거이다.³²⁾

그러나 호란 후 조선은 여진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상국의 위치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국체의 상징이던 왕이 북방 오랑캐인 청에 무릎을 꿇었다는 패전의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치욕적인 상실감과 손상된 자부심의 회복은 조선후기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³³⁾ 인조의 출성으로 호란은 종료되었지만 강화 교섭에서 합의된 여러 실무적인 처리의 과정은 양국간 이견의 쟁점이었다. 그 쟁점은 정명 원군파병 문제, 포로송환 문제, 조선 국왕 책봉 및 연호사용 문제, 그리고 삼전도 전승기념비 건립문제로 압축된다.³⁴⁾

먼저 정명원군 파병문제로 이는 청의 3차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1637년 10월초까지 5,000명 규모의 병력을 요청한 데 기인한 것이고,³⁵⁾ 이후 1638년 3월 다시 동일 규모의 파병 요청이 있었다. 조선은 두

29) 『顯宗實錄』卷7, 顯宗 5年 1月 癸酉條 “今日軍陣之所行用者 只是威繼光之法 反不及五衛舊制 請下詢掌兵之臣 上下其議 該曹以爲不可率爾變通 事遂寢”; 『肅宗實錄』卷50上, 肅宗 37年 2月 丙寅條

30) 『弘齋全書』卷九, 「序引二·軍旅大成序」 “至若我朝 則罷五衛而創三營 遂使兵農爲二岐 而得失之分 從可知矣…以我國土疆 北接建州 南近日本 防禦戰伐之往蹟 皆可以爲法於來後也.”

31) 『凌虛關漫稿』, 「武藝六技演成十八般說」 “余惟六技固可爲兼授之用 而後輩之智巧或愈於前輩 便捷精利之反復勝焉者有之 卽所謂竹長槍旗槍銳刀倭劍交戰月刀挾刀雙劍提督劍本國劍拳法鞭棍”

32)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2004, p. 190.

33)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p. 14.

34) 이하 유재성, 『병자호란사』, pp. 250~268.

35) 파병을 둘러싸고 조정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시 청에 대해 온건 외교노선을 표방

번째 요청에 응하여 포수·궁수 혼성의 5,000 병력(상장 李時英, 부장 柳琳)의 원정군을 파병하였다. 1639년 10월에도 청은 정명계획을 세우고 조선의 수군 파견과 군량의 조달을 요구해왔다. 이에 평안감사 임경업(林慶業)을 상장으로 전선 120척과 병력 6,000명, 군량 10,000포를 출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⁶⁾

이후에도 청은 1641년 3월 또 한 차례의 정명작전에 대한 조선의 협력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조선은 포수 1,000명, 기병 500기, 마부 500명 등 유림(柳琳)을 주장으로 하는 2,000명의 병력을 출병시켰다. 그리고 다시 그해 5월에도 포수 500명 증원요청을 받았다. 이렇듯 수차례에 걸친 청의 조선군 파병요청은 강요적인 것이었고, 조선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조선군의 파병으로 피폐한 조선의 재정은 고갈되었고 청에 대한 조야의 적개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다음은 포로송환문제이다. 당시 포로송환을 둘러싸고 청은 소위 속가(贖價)라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송환을 지연하거나 속가의 폭등, 그리고 환향녀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최초로 정부 주도로 시작된 포로송환은 점차 민간주도로 넘어갔다. 청군의 조선인 포로는 부녀자 피랍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겨냥한 것이었다. 속환의 기간도 대일본 포로송환이 40년간 지속되었던 것과 달리 1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송환된 포로 중에서 부녀자의 처리문제는 조선사회내의 심각한 분열과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극단적인 시비론을 불러일으켰다.³⁷⁾

하여 화의를 성립키는 데 역할을 맡은 좌의정 최명길은 청의 파병요구 거절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당시 청은 파병하지 않을 경우 제차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일시적으로는 최명길의 태도에 감탄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練藜室記述』卷26, 仁祖朝 故事本末, 淸人徵兵.

36) 이러한 상황에서 임경업은 조선 파병의 부득이성을 명군에 알리고 청군의 동향을 명군측에 제보하는 등 반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 11월 음 알다이(龍骨大) 등 청의 사신은 조선에 임중한 항의가 있었다.

37) 강성문, 「丁卯·丙子胡亂期の 捕虜 送還研究」, 『軍史』 제46호, 2002, pp. 151~156.

그리고 연호 및 조선왕 책봉문제와 삼전도 전승기념비 건립문제이다. 인조의 항복 직전에 맺은 강화조약에 따라 이제 조선은 명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폐지하고 청국의 ‘숭덕(崇德)’을 사용하게 되었다. 청은 전쟁이 종결되었지만 조선이 청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조선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했다. 결국 병자호란이 종식된 지 3개월째인 1637년 5월 조선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기존과 달리 태도를 바꾸어 청과 조선의 관계에 빗대어 조선에 보내는 자신들의 국서에 ‘관영(寬永)’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조선조정에서는 이를 놓고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하자는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조선은 청국 연호사용문제와 결부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왕 책봉문제에 대해서도 청 태종은 ‘조선국왕 책봉조서’를 보내 조선이 청국의 속국임을 확인함으로써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일본에 패배하여 조선의 지배권을 상실할 때까지 조선은 240여년간의 청국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삼전도 전승기념비 건립은 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회피하고자 했으나, 조선은 강화조약파기를 빌미로 협박하는 청의 강경자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637년 11월 25일 당대의 문장가들이 동원되어 최종 문안을 완성하여 청국의 검토를 거쳐 1639년 2월에 청 사신 마푸다의 감독하에 삼전도 나룻가에 높이 3.95m, 폭 1.4m의 전승기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2) 기억의 강화와 복합화

왜란을 겪은 후 다시 호란을 겪은 조선의 현실은 암울한 상태였다. 대외관계상으로 종주국인 명과의 관계는 폐절되고 청과의 군신관계가 강요되어 한말까지 종속관계가 결정되었다. 호란에 대한 전쟁기억은 대체로 그 치욕

적인 현실의 관찰과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호란의 아나바시스라고 할 나만갑(羅萬甲, 1592~1642)의 『병자록(丙子錄)』이나 석지형(石之珩)의 『남한일기』 등이 그것이다. 나만갑은 남한산성의 농성 동안 인조의 측근에서 떠나지 않고 양향사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그날그날 적어 호란의 체험을 남겼다.³⁸⁾ 아마도 이 시기의 가장 처절한 체험은 인질로 심양에 가 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체류일기와 보고인 『심양일기(瀋陽日記)』와 『심양장계(瀋陽狀啓)』일 것이다. 호란 직후의 조선인들의 청에 대한 감정은 그들이 인질로서 경험한 전쟁의 상처만큼이나 컸을 것이다.

대체로 호란 이후 조선인들의 전쟁기억은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호란의 기억은 왜란의 체험과 중첩되면서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화이관의 공고화와 다른 한편으로 실학자 중심의 화이관의 변화라는 양면적인 현상의 반영이었다. 화이관의 양면적 현상은 주자학계열과 실학계열로 나뉘었다. 전자는 이전의 소중화의식에 존명시대 의식의 강화와 대청 적대의식의 증대라는 요소가 첨가되어 화이관의 공고화와 동시에 화이관의 변화를 내포한 것이었고, 후자는 화이관의 비판이란 변화를 수렴하고 있었다. 양자는 서로 모순, 대립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화이관의 변화를 통해 근대의식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주자학 계열은 자주성의 확립에 기여하였고, 실학계열은 수평적 국제질서 관념에 기여한 바 컸던 것이다.³⁹⁾

이제 전쟁의 기억이 화이관을 매개로 어떻게 대청관념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란 후 화이관의 변화 속에서 대청관계는 형식적으로 군신관계하에서 내적으로 북벌론(北伐論)으로 표현되는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과 존주론(尊周論)의 관념하에 있었다. 대일관계에서는 임란 직후 통

38) 나만갑, 『丙子錄』, 東京, 自由討論社, 1921.

39) 조성음, 「朝鮮後期 華夷觀의 變化」, 『第36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韓國史研究會, 1993, p. 140.

신사의 방문과 국교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적개감과 문화적 우월주의가 내재된 관념이 유지되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효종(1649~1659)은 7여년간 호란에 따른 불모생활의 치욕적인 상처를 안고 즉위하여 승명배청(崇明排淸)과 복수설치(復讐雪恥)를 기치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삼학사전(三學士傳)』을 지어 병자호란시 연관으로서 직분을 다한 삼학사의 순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전쟁 중의 척화론이 북벌론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효종·현종·숙종 3대에 걸쳐 국가의 기본방향은 송시열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그가 기사환국으로 정치적 희생을 당한 후에는 제자들이 그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그 결과, 화양계곡에 만동묘를 설치했으며, 다시 1704년 숙종조에 명 왕조 몰락 1주갑을 맞이하여 대보단을 설치했다. 이렇듯 명에 대한 조선측의 재조지은에 입각한 태도는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고, 다만 북벌론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존주론으로 정립되어갔다. 대보단의 설치는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진다.⁴⁰⁾

북벌론은 본질적으로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고토회복을 추구한 이래 조선초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다시 재기한 ‘요동정벌 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북진사상이다. 북벌의 주체였던 효종과 송시열의 생각에는 격차가 있었지만, 이른바 북벌운동은 조선후기의 정치상황의 변천에 따라서 송시열적 북벌론으로 전화되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⁴¹⁾ 그러나 북벌론은 18세기 후반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7세기 후반에 윤휴(尹鑄, 1617~1680)는 복수설치를 기치로 남중국의 대청반란세력인 오삼계(吳三桂)군과의 제휴에 의한 북벌론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의 판단은 “아국의 10만 정병과 양서양향(兩西糧餉)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10일내에 심양(瀋陽)을 빼앗고 관내(關內)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⁴²⁾ 그의 주장에서 북벌은 이른바 ‘외유삼사(外有三

40)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pp. 106~107.

41) 이경찬,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淸溪史學』 5, 1988, p. 250.

事)로 여겨진 북벌(北伐), 도해통정(渡海通鄭), 여북절화(與北絶和) 가운데 가장 중시되었다.⁴³⁾ 윤희의 대비책은 북벌 단행은 물론 대만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성공(鄭成功) 세력과 연결하고 북쪽과 외교를 단절하는 등 실로 강경한 조처들이었다.

한편, 숙종조에 북벌론에 대한 제안은 조정의 관료 이외의 인사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廣州의 김익호(金翊虎)의 상소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⁴⁴⁾ 그러나 송명보어나 복수설치라는 명분에 앞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내수(內修)로써 민생보전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북벌문제는 그 실현문제를 놓고 반대에 직면했던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영고담회귀설과 같은 대륙정세의 변화와 관련한 논의와 결부되었다.

사실, 영고담회귀설이란 조선에서 불안정한 중원지역의 정세로 미루어 청이 머지않아 그 발원지인 닝구타(寧古塔)로 회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당시 일부 식자들간에 형성된 대외관이었다. 이 같은 전망은 대륙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의 몰락과 재침, 그리고 몽고의 침공과 같은 동북아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었다.⁴⁵⁾ 특히, 청의 몰락과 더불어 유사시 중원을 평정할 제3세력으로 몽고가 부상하리라는 소문은 맹위를 떨쳤다. 그 같은 소문은 그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조 재위년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⁴⁶⁾

그러나 일부 인사는 당시의 전망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일축했는데,

42) 『肅宗實錄』卷2, 肅宗元年 二月 丁酉條 “我國自有十萬精兵, 兩西糧餉, 亦可易辦. 不十日可據瀋陽. 瀋陽既阜關內震動, 無事不成之慮.”

43) 『肅宗實錄』卷2, 肅宗元年 二月 丁酉條 “方今外有三事, 北伐一也, 渡海通鄭二也, 與北絶和三也, 內則嚴宿衛一事也. 凡此數者, 若不汲汲圖之, 則禍患必至.”; 『肅宗實錄』卷2, 肅宗元年 4月 癸丑條.

44)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2004, p. 172.

45)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pp. 64~83.

46) 『英祖實錄』卷28, 英祖 6年 12月 辛亥條; 『英祖實錄』卷29, 英祖 7年 6月 乙未條.

예컨대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영고탑 회귀설과 관련된 조선의 위기의식이 근본적으로 중국쪽의 지리를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론계 인사인 이이명(李頤命, 1658~1722) 역시 원론적인 측면에서 왕의 자기성찰을 강조했을 뿐 소문이 정확한 정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로 보면, 영고탑 회귀설은 유사시 외침에 대한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방법적으로는 개발론과 내수외양론으로 엇갈리면서 그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⁴⁷⁾

여하튼 호란을 통한 전쟁 기억은 화이관을 중심으로 북벌론과 같은 강경론은 말할 것 없고, 청을 위시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도 불러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왜란과 호란을 겪은 조선사회의 대청 또는 대일본관은 감정적 적개심으로부터 문화적 우월주의에 의한 소중화 의식이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전이된 향상을 띠었다는 사실이다.⁴⁸⁾ 따라서, 외형적으로 조선이 양국에 동지사와 통신사를 파견하고 종래의 사대교린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내재하는 전쟁의 상처를 문화적 우월감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일부 지식인들이 전개한 북학운동을 통해 종래의 화이관에 일정한 변화가 일면서 대청인식이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에 대한 인식 역시 다소의 변화가 있어 낙관론과 위기론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 속에서도 다른 한편에서 일본 문물의 선진화의 경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예다. 그것은 화이관을 극복해가는 양상과도 연계되는 것이었다. 북학파들이 존주의식과 현실을 분리시켜 청에 대한 적개심과 현실적인 문물의 발전 양상을 구분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실학자들은 일본의 문화적 발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일본의 위협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

47)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pp. 71~77.

48)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89, pp. 49~53.

하였다.⁴⁹⁾ 이러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다산이 말한 바와 같이 문화와 그 민족의 활동 여하에 따라 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튼 것이었음을 말해준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왕조가 대일관계와 달리 대청관계에 있어서 대명의리와 현실적인 외교관계를 정리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임란 후 명에 대한 '재조지은(再造之恩)'에 입각한 존주대의와 존명배척의식은 영조 47년(1771) 국왕이 직접 저술한 『어제풍천록』을 통해서 표출되었고, 사도세자가 북벌에 대한 미련을 떨구지 못한 채⁵¹⁾ 지은 「황마찬」에서도 잘 드러난다.⁵²⁾ 그런가 하면, 18세기말 정조가 규장각 각신들을 독려하여 「존주회편」을 편찬한 것도 결국 시대적 전환에 따른 선왕들의 이념을 국가적 수용물로 정리한 셈이었다.⁵³⁾ 요컨대, 18세기 후반까지도 조선 사회에는 양란에 대한 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큰 현실적 과제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⁵⁴⁾

49) 정약용, 『民堡議』, 「總義五則」.

50) 정약용, 『與猶堂全書』第一集 第十二卷, 「詩文集·拓拔魏論」.

51) 권오영, 「凌虛關漫稿解題」, 『英祖·莊祖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p. 240.

52) 『凌虛關漫稿』, 「皇馬贊」, “我家以馬上得之 國初有八駿 至今傳其神 余所常御者 毛黃諦高鬃鬣如霧 是謂皇馬 既估且閑 我聞八尺爲龍 七尺爲駮 願是馬當求之駮龍之間 恨不一鞭千里蹴踏飛騰於燕山薊水之場也.”

53) 정옥자, 『朝鮮後期 朝鮮中華思想研究』, p. 116.

54) 오경원 編, 『小華外史』8卷, 「序」, “有明御宇視同內服涵照作興於東漸之化者比古爲盛政 所謂進於中國則中國之者也 然今之中國非昔之中國則皇明文獻之足徵 願不在於我東乎 … 皇朝之正史則寂寥篇簡 始可與天下共之載 筆者必有取焉 是言易與俗人道哉.”

4. ‘6·25전쟁’의 반추와 전망

(1) 전쟁의 기억과 반추

6·25전쟁은 한반도에 냉전의 상흔을 각인시켜왔으며, 휴전 후 정전체제 하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발단이 되었다. 이 전쟁은 20세기에 한민족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면서 겪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더불어 또한 차례의 민족적 비극이었다. 전쟁의 원인과 책임문제를 놓고 비밀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사실과 다른 여러 해석이 존재하였다.⁵⁵⁾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성을 넘어서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은 개전 당시의 제반 절차나 조치 등은 물론 그후의 정략적인 전후관리를 통해서 ‘남침’ 사실을 은폐하거나 오히려 ‘북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비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서간 이념적 대립과 냉전의 심화 속에서 김일성이 주동하고 스탈린이 설계했으며, 모택동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⁵⁶⁾ 그리고 북한의 남침 사실을 포함한 전쟁의 국제전으로의 비화과정 등이 자료상으로 분명하게 포착된다. 이제 6·25전쟁의 연구는 전쟁과 정치의 관계, 제한전쟁(limited war)이라는 기존 세계 국제정치학계의 정통적 한국전쟁 이해, 이

55) 6·25전쟁 연구는 기원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에 의한 수많은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 주요 저술이 1960년 중반에 이미 1만여편이 넘었고, 그후 해당국의 관련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구동향에 관한 글로 수편이 발표되었다(대표적으로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박영사, 1989를 참조). 대체로 한국전쟁을 연구해온 시각은 전통주의, 수정주의, 신수정주의로 구분한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글로는 허남성, 『한국전쟁의 현대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정책연구보고서 99-19),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9를 참조.

56) 이병주, 「구 소련 비밀자료에 의한 한국전쟁 발발 배경」, 『전사』 제4호, 2002, pp. 167~203.

른바 수정주의와 전통주의의 한국전쟁 해석, 그리고 오인(misperception) 이론에 바탕을 둔 접근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교정과 보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⁵⁷⁾

이처럼 그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6·25 전쟁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인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실존적인 문제다. 전쟁의 기억과 전쟁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산재하지만, 전후의 ‘역사적 시간’은 한국사회를 ‘전쟁체험과 기억’의 공간 안에서 현실과 정신을 긴박시키는 한편, 경제발전과 시민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일구어내는 기간이었다. 6·25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그 어느 전쟁 때보다 전쟁 당사국간의 치열한 전쟁기록과 그를 통한 전쟁기억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전국인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전쟁에 대한 기록과 전쟁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발 빠른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목된다. 그들은 1950년 10월 16일, 미 제8군 참모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보자료수집을 위해 이른바 ‘인디언헤드 특수부대’(T/F Indianhead)를 편성하여 평양·서울 등의 전투현장에서 북한군 정책문서와 전쟁계획·명령·회의·보고문서를 노획했으며,⁵⁸⁾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군 당국은 1960년대에 ‘한국전쟁’(Korean War)에 대한 공간사의 편찬을 완료하였다.

중국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 경험총결편사위원회’를 편성하고 1954년 8월부터 1955년 8월까지 1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항미원조전쟁총결(抗美援朝戰爭總結)』을 출간했다. 중국측의 공식적인 전사인 이 책은 전체 4권으로 전쟁전반에 걸친 개괄을 다룬 ‘전쟁간사(簡史)’, 전술경험을 종합한 ‘전술경험총결’, 그리고 각 제대별 전투사례의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후 중국의 군사과학원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57) 박명림, 『한국전쟁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p. 24.

58)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MH Pub 20-2, 1961, p. 652.

항미원조전사』를 발간하여 전쟁을 통해 얻은 기본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공간사의 일종인 『당대중국총서』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전투경험을 공식적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의 공간 간행물에서는 전쟁의 승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전쟁지도와 지원군 장병의 용전 분투, 전 인민들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양국 군대와 인민들의 피로 맺은 전투우의와 단결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자평은 정치적인 해석의 성격이 강한데, 양적(楊迪)이나 두평(杜平)과 같은 참전자들의 수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⁵⁹⁾

이렇듯 미군과 중공군에 의한 전쟁기록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사기록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⁶⁰⁾ 오히려 우리는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전란을 충실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자 적극적인 전쟁기록 및 체험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것이 전쟁 시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진한 ‘한국전란1년지’부터 ‘한국전란5년지’의 기록 및 편찬이었다.⁶¹⁾ 당시 전사편찬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은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들은 저 임진왜란과 같은 미증유의 대국난을 겪으면서도 삼도수군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이 가장 치열한 작전지휘의 그날그날 쉬이지 않고 “난중일기”를 만들어 후세에 전한 것이라던가 영상 유성룡이 당시의 체험과 견문을 “징비록”에 수록하여 후세에 전하여 준 그 업적에 최대의 감사를 금

59) 백기인, 「한국전쟁기 중국군의 ‘국방군’으로의 개혁과정」, 『전사』 제3호, 2001, pp. 307~308.

60) 백기인, 「6·25전쟁기의 전사편찬과 운영체계」, 『군사』 제56호, 2005, pp. 165~191.

61) 6·25전쟁 당시 전사 편찬의 결과는 『한국전란지(Korea in War)』의 형태로 간행되었다: 『한국전란1년지(1950. 5. 1~1951. 6. 30)』, 1951. 8. 1일 인쇄, 10. 15일 간행; 『한국전란2년지(1951. 7. 1~1952. 6. 30)』, 1953. 4. 15일 인쇄, 4. 20일 간행; 『한국전란3년지(1952. 7. 1~1953. 7. 27)』, 1954. 2. 25일 인쇄, 3. 1일 간행; 『한국전란4년지(1953. 7. 28~1954. 7. 31)』, 1955. 5. 15일 인쇄, 6. 1일 간행; 『한국전란5년지(1954. 8. 1~1955. 7. 31)』, 1956. 5. 15일 인쇄, 6. 1일 간행.

할 수 없었던 것이니 어느 의미에서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세워놓은 군사적 위훈이나 정치적 업적보다도 그 일기 그 수록이 좀 더 값있고 빛난다고도 보여지는 때문이다…… 개인으로도 이리하거던 하물며 민족이나 국가로서야 편사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일컬어 무엇하랴? 그날그날의 생생한 교훈을 찾기 위하여 屍山血河 속에서 귀중한 자료를 주어 모으며 후손만대의 거래를 위하여 역사를 엮을 줄 알며 이를 애끼고 또 전할 줄 아는 것은 곧 바로 그 민족 그 국가가 “문화”이나 “야만”이냐를 규정짓고 마는 관건으로도 되는 것이다.⁶²⁾

후일 북한이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사(祖國解放戰爭史)』(1959년) 발간을 통해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자 우리 국방부가 1963년 『한국전쟁사』의 편찬을 결정하고 그 첫권을 1967년 10월에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로 발간했던 것도 전란지의 편찬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⁶³⁾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시 국방부가 편찬한 공간사 발간은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결의 속에서 국가적으로 ‘한국전쟁사’ 편찬의 작업을 추진한 것이었고, 나아가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의 기초로서 장차 국방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군사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⁶⁴⁾

한편, 한국에서의 6·25전쟁에 대한 기억은 전쟁의 보훈과 기념사업, 그리고 각종 행사 등 연례적인 기념사업 및 미해결된 과제의 처리, 즉 포로

62) 이선근, 「한국전란1년지 발간에 제하여-전사편찬회의 발족과 그 경과」, p. 15.

63) 문희석, 「發刊辭」, 『韓國戰爭史』Ⅰ, 1967. 북한의 6·25전쟁 공간사는 이미 1952년 전쟁 중에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되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조선노동당출판사, 1959)이란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그후 3권으로 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사회과학출판사, 1972)로, 다시 『朝鮮全史』 제25~27권(현대편)으로 『조국해방전쟁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로 발간되었다.

64) 백기인, 「6·25전쟁기의 전사편찬과 운영체계」, p. 169.

송환이나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원되거나 강화되었다. 예컨대, 정부에서는 휴전 이후 국방부와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왔으며, 이는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해서 정부의 기념일로 공식화되었다. 2000년에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주관으로 대대적인 기념사업 및 행사를 전개하기도 했다.⁶⁵⁾ 그밖에 전후 전국에 산재한 전적지를 발굴하고 그곳에 역사적 상징물을 건조하여 유적화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총 702개소에 달하는 참전기념조형물을 건조하였다.⁶⁶⁾ 그리고 전쟁시 순직한 전몰장병을 위한 안치시설로 국립묘지를 설치한 것도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의 희생자를 위무하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적인 사업이었다.⁶⁷⁾

65) 이후 6·25기념일은 문화공보부 주관(1985. 6. 11 법령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후 국가보훈처 주관(1994. 3. 9 법령개정)으로 다시 변경 시행되었다. 특히, 2000년 전쟁 50주년 기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50주년기념사업회와 기념사업단을 발족시켜 6·25전쟁 기념조형물 건립 및 6·25전쟁사 제조명 등 9건의 주요사업, 전사자 유해발굴/안장 등 10건의 추모·보훈, 그리고 호국·안보 및 평화·번영, 홍보 등에 걸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하였다(주미한국대사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정책건의서』, 1999. 10. 13;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계획』, 1999. 7. 12 대통령 보고).

66) 국가보훈처, 『참전기념조형물도감』, 1996, p. 1.

67)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가로, 건국과정에서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과 여수/순천사건 및 각 지구의 공비토벌작전으로 전사한 장병, 그리고 6·25전쟁시 순직한 전몰장병의 안치를 위한 장소를 모색하여 동작동 국군묘지를 확정된 후, 정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창설(국방부 일반명령 제218호)하고, 이듬해인 1956년 4월 13일 국군묘지설치법령(군묘지령, 대통령령 제1144호)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그해 4월 14일 제39차 국무회의에서는 현충일을 제정하였다. 한편, 국군묘지는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로 승격(국립묘지령, 대통령령 제2092호)되었으며, 1979년 8월 29일부로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를 창설(대통령령 제9581호)하였다. 그후 2005년 7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시행 2006. 1. 30」 의거, 국립묘지의 명칭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하고 안장대상자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 순국 선열 및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경찰관, 향토예비군은 물론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전개되는 한편, 참전자들의 여러 형태의 체험담인 아나바시스, 곧 국방부에서 추진한 참전자 면담을 통한 구술자료와 자신의 자서전적인 회고록 등의 출판은 미국측 참전자나 중공군측 참전자들의 회고록과 더불어 1980년대에 주된 저작물로 생산되어 생생한 전쟁의 기억을 재생시키는 자료가 되었다.⁶⁸⁾ 역사상 6·25 전쟁만큼이나 다양한 참전국의 군인이나 관련 인사들의 참전기나 회고록이 쏟아진 경우도 드물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사실적인 기술을 넘어서 하나의 체험과 정신의 공감각적 결합에 의한 무형의 풍부한 문학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 역시 그 어느 전쟁과도 다르다.⁶⁹⁾ 그것은 단지 전쟁의 비극성을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쟁과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인간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학적 공간에 대한 탐색은 보다 다양하면서도 심원한 전쟁의 스펙트럼과 의미를 재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25전쟁에 대한 기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런 기억의 유산으로 전쟁시 피·아의 작전이나 피난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예컨대, 노근리사건을 비롯한 전쟁기의 민간인 피해의 사실여부는 그 사실 자체는 별도의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이지만,⁷⁰⁾ 이 같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68) 정토용, 「6·25전쟁 아나바시스: 장군들의 회고록에 관한 연구」, 『군사』, 2004, pp. 93~124.

69) 전쟁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대체로 전쟁과 전쟁의 체험을 주제로 한 문학이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논의는 일찍이 1930년대 후반 박영희(「전쟁과 조선문학」, 『인문평론』 1호, 1939. 10)나 이현구(「전쟁과 문학」, 『문장』 9호, 1939. 10), 그리고 최재서(「전쟁문학」, 『인문평론』 9호, 1940. 6) 등에 의해서 시도된 후 1960년대에 백철(「전쟁문학의 개념과 그 양상」, 『세대』 2권6호, 1964) 및 광종원(「전쟁문학이란 무엇인가」, 『월간문학』 10월호, 1969)과 전규태(「한국고대 전쟁문학서설」, 『아세아』 1권5호, 1969) 등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89, pp. 19~28).

70) 노근리사건은 AP통신의 보도로 제기되었는데, 이는 *The Bridge at Nogunri*(C. J. Hanley

어 이른바 ‘전쟁과 인간’이라는 새로운 주제와 가치에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⁷¹⁾ 전쟁이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윤리기준이나 도덕적 요구로 재단하기에 앞서 전쟁과 인간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간화와 민주화를 전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전쟁이 남긴 과제

6·25전쟁이 휴전 상태로 종결된 지도 이미 50여년이 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전상태로 대치 중인 현재의 상황은 한국사회의 달라진 인식과는 달리 실제적인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간 남·북한이 상호갈등적인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관계개선에 힘써왔고,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한정부에서 전폭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전개해왔지만 남북분단의 구조적인 현실인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미래 또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쟁이 남긴 상처로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가족간의 결합문제이다. 전후 남북한에는 인위적으로 가족이 해체된 소위 ‘이산가족’이 무려 1천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도적 재회를 위해 1971년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어 무려 40여회에 걸친 예비적인 회담 끝에 1972년 8월 29일 평양에서 제1차 본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1985년 12월 4일까지 10차례의 본회담을 진행하였다. 남북간의 적십자회담을 통한

et al. New-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1. 3)로 정리되었고, 한·미간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는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노근리사건조사반, 2001. 1)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71)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생략하고, 학계에서의 논의로는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제54호(2004. 12)에 실린 제 논문을 참조.

이산가족의 해소 노력은 회담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마침내 제8차 회담(1985. 5. 28~29)의 합의에 따라 분단 이래 최초로 그해 9월 20~23일(3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50명) 및 예술공연단(50명)의 상호교환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이산가족문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나 규모, 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군포로에 관한 문제 또한 전쟁의 유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남아있다. 6·25전쟁시 피·아 포로는 휴전협상을 통해 교환문제가 논의될 당시부터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해온 난제였다.⁷²⁾ 특히, 공산측은 유엔군과 아군의 억류포로를 선전수단으로 활용한 나머지 그 정확한 실체와 송환절차에 있어서 표리부동한 입장을 견지하여 아직도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미해결 상태이다.⁷³⁾ 북한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994년 북한측에 포로가 되었던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오면서 그들의 존재는 분명해졌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에서는 1996년 7월 국군포로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군포로·실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현재 국군포로업무는 전산화를 통한 신원정리작업과 실종자 전사처리 및 보훈혜택부여, 그리고 실종자 명단공개 및 민원신고 등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1998년 10월 현재 136명이 생존포로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⁷⁴⁾

한편, 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6·25전쟁에 대한 전쟁기억은 분단의

72)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문제」, 『군사』 제35호, 1997, pp. 154~155.

73) 조성훈, 「미귀환 국군포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329.

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 1998~2002』, 2004, pp. 210~211. 최근의 정부측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는 1,630명 중에서 사망자 830여명과 행불자 250여명을 제외한 54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국군포로 외에 납북자 485명을 포함한 1,000명 안팎의 북한에 생존해 있는 억류자들의 송환문제를 북측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공장건설, 현물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4월 21~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 2006. 4. 10; 4. 14, a02).

현실과 맞물려 있어 그 해석과 연구에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기억과 연구는 새로운 퍼스펙티브의 모색, 이론과 방법의 고민, 자료의 발굴과 수집, 비교 고찰의 문제의식, 전체로부터 개별 세부 주제에 대한 천착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6·25전쟁의 연구는 평화, 인권, 통일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실을 틀지운 사태에 대해 현실의 과제를 부단히 연계시킴으로써 비로소 의미있는 학문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6·25전쟁의 연구는 평화연구이자 인권연구이고 통일연구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쟁의 기원과 원인의 논의로부터 전개과정, 점령과 통치정책, 포로문제, 학살문제, 영향, 나아가 휴전체제와 한미관계, 안보질서의 변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 통일, 인권, 사회경제변동이라는 제 연구주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⁷⁵⁾

그러나 중요한 것은 6·25전쟁의 연구가 오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해석을 가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한 현실을 결정하는 인자로 존재하는 6·25를 반드시 오늘의 해결책을 찾는 필요성에 긴박시킬 경우 그것은 사실에 대한 오류는 물론 과장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것이 역사적인 발전과 학문적인 열린 시각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사실과 존재의 양상을 우리의 현재적인 기대나 인식의 수준에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담론체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로서’ 철저히 연구되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현실적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다루는 공정한 지적인 태도라 하겠다.

그러기에 왜 전쟁이 발발했고, 역사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전쟁간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전쟁본질에

75) 박명림, 「미래를 위한 과거: 21세기 한국전쟁연구의 정신, 방법, 전망」(한국전쟁연구학회 학술세미나, 2003), p. 59.

관한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구주제다. 임란과 호란, 그리고 6·25전쟁, 이 세 전쟁을 필자가 동시에 거론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정점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한 세 전쟁은 공통적이면서도 시대적 조건이나 국제적 상황요인에 따른 상이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 같은 한반도와 전쟁에 관한 문제를 보다 냉정하고 구조적으로 고찰할 필요를 제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쟁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의 제반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에서 야기된 전쟁의 역사적 요인과 조건, 그리고 지정학적 관계에 의한 국제성의 이해⁷⁶⁾를 위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안목을 동시에 적용한 군사사적 안목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5. 결 론 - 세 전쟁의 전쟁사적 의의

지금까지 한국사상의 전쟁 체험과 그 유산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현대사의 6·25전쟁의 전쟁기억과 그

76) 임덕순, 『地政學』, 법문사, 1999, p. 61. 지난 세기초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권쟁탈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 가운데 지정학적인 성격을 지닌 관점은 유의할 만한 하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은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노·일전쟁을 거쳐 미·영·러와의 관계에서 '국제적 흥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식민지 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으로 연결되었고 또 다시 38도선에 의한 한반도 분할로 이어져 6·25전쟁의 불씨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간지대(rimland)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때, 한반도가 다극체제하에서 완충지대로서가 아니라 양극체제하에서 열강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점이다. 20세기 냉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또한 동·서의 전략적 접점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한반도에 대한 외세개입의 유형은 일방적 독점지배와 관계국 사이의 분할지배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후자의 실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로서 한반도의 분할결정은 강대국들의 대결을 분할로 완화하고자 했던 역사상의 한반도 분할론, 즉 1593년 일본의 豊臣秀吉안과 명의 魏學曾 代案, 1894년 영국의 김벌리안, 1896년 일본의 山縣有朋案, 그리고 1903년 러시아의 로젠안 등과 같은 논의의 현대적 재판이었다고 하겠다.

해석의 실제와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이제 이 세 전쟁을 통해서 시사된 교훈을 토대로 한국전쟁사상의 전쟁을 둘러싼 인식과 접근방법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를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도 전쟁의 원인,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특히, 전쟁을 둘러싼 제반 요인, 그 가운데 시·공간적 요소로 결정된 지정학적(geo-political) 또는 지전략적(geo-strategic) 요인은 전쟁을 야기하는 구조적이면서도 항구적인 고정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상황적 요인이나 계기적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⁷⁷⁾ 예컨대, 대륙세력(land power)와 해양세력(sea power)의 접점(nexus)이 되는 한반도는 일본이 명으로의 진출을 명분으로 야기한 임란이나, 후금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배후세력인 조선을 침공한 호란, 그리고 이념적 확산을 매개로 북한과 동조세력들이 주도한 6·25전쟁을 통해서 일종의 주변국의 대리전적 지역화 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조선이나 신생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세력과의 안정 문제가 전쟁에 미친 내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전쟁이 국방과 군사문제의 또 다른 성질의 현상이고, 결코

77)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완충국'이라는 키신저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김승영, 「'완충국' 한반도와 미국의 전략」, 조선일보, 2006. 3. 20, 30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관한 문제는 오랜 동안 학자들의 한반도 연구 주제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는 아시아의 대륙세력과 태평양의 해양세력 간의 경쟁의 초점이 되어 온 일종의 경계선(fault line)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었다. 스타인버그 같은 학자는 한반도가 전략적 위치로 인해 외세나 경쟁관계에 있는 구미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온 점에 비추어 한반도를 'Nexus of Asia'라고 부르기도 하였다(David I. Steinberg, *Korea: Nexus of East of Asia*, New York: American-Asian Educational Exchange, Inc, 1968;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博英社, 1981, 增補重版(1975, 初版), 14쪽). 문명의 경계선(faultline)이란 개념은 S.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1993을 참조.

자국만의 고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의 분석은 단지 대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 사건을 결정지은 대내·외적인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력과 국가안보가 본질적으로 상대국과의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가상적국과의 관계는 전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⁷⁸⁾

따라서 전쟁연구에 고려되어야 할 방법의 하나가 비교적인 관점에 의한 전쟁분석이라고 하겠는데, 우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제반 동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란이나 호란 당시에도 대륙이나 일본내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쟁수행과정에서 파병이나 지원문제가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했던 점을 감안하면 역내의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은 결코 자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평화의 유지와 안정의 관리를 위해서 대주변국의 군사력을 비롯한 정세파악 및 정보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전쟁사상 전쟁수행 및 전후처리에서 단독일 때와 공동의 연합작전이었을 때 그 전쟁의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위의 세 전쟁 중 연합전력에 의해 전쟁을 수행한 경우는 임란과 6·25전쟁이었다. 양 전쟁에서는 전쟁도중에 우리가 아닌 참전교전자가 강화협상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가 강화협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전개된 전쟁은 대체로 협상은 공전하였고, 그로 인한 전선의 양상은 아측에 매우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임란 당시는 조·명 연합군의 지휘권 문제로 조선의 해군은 독자적인 작전의 수행에 제한을 받았고, 6·25전쟁 당시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화협상에서 연합전력은 그 목적과 취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컸던 것이다. 전쟁에서 강화의 조건, 관련국과의 전쟁처리 절차,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의 복원 등을 위해

78)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p. 19; 박성수, 『조선후기 실학의 국방론』, 『도산학보』 5, 1996, p. 21.

서도 임란이나 호란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전쟁이 일어난 후 일정한 시간의 경과 속에서 형성되는 이른바 ‘전쟁의 기억’과 관련하여 ‘전쟁문학’이라는 정신적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전쟁문학은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을 개별화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다양한 성찰과 양상을 그려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실제와 정신적인 공간간에 큰 낙차를 발생시키며, 그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이란 일반 국민에게는 일정한 피해이며, 그 책임이 국가의 몫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장차전에 대비하여 전쟁의 예방은 물론이고 전후처리에 있어서 국민적 고통의 해원과 국민적 통합 등 전후 갈등관리에 대한 비상기획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발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도 한국의 전쟁사가 주는 교훈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원고투고일 : 2006. 4. 11, 심사완료일 : 2006. 6. 5)

주제어 : 한국전쟁사, 전쟁기억,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Memory and Its Interpretatio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Baek, Ki-in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war experiences and the legacy of those memories in Korean history, examines comprehensively the memories and interpretations of wars in Im-jin Japanese Invasion and Byoung-ja Manchu Invasion of the late Chosun period, and also the Korean War of the modern era. With the three wars as experiential data for understanding wars in the Korean peninsula structurally and synoptically, this writer concludes as follows on the recognition of and approaches to war ideologies in Korea.

Firstly, above all there is a need for a fundamental insight into the causes of wars that break out in the Korean peninsula. In analyzing the basic factors concerning the wars, geopolitical or geo-strategic elements determined by spatial-temporal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as permanent conditions of a systematic grasp of wars there, be given priority to any circumstantial or motivational factors. For instance it must never be overlooked that the peninsula, being a nexus for land and sea powers, has exhibited a consistent character of proxy warfare for the surrounding nations in Imjin Japanese Invasion War, Byoungja Manchu Invasion War and the Korean War.

Secondly, though wars in the peninsula were of course influenced by the nation's defense capability, more fundamental influences came from the intrinsic factors rooted in stability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powers. Therefore analyses of warfare in the Korean peninsula

must not remain at merely internal or external levels, and must take due notice of structural in/external factors that determined the conflict in question. Since military strength and national security have for their premise the balance of power with the opposing nation, the relationship with potential enemies remains an significant factor in studies of war.

The third conclusion concerns the application of synoptic comparative perspectives on Korean war studies. A synoptic comparison of Imjin Japanese Invasion War, Byoungja Manchu Invasion War and the Korean War yields highly useful frames of reference. For example it is noteworthy that historically wars in the Korean peninsula differed greatly in outcomes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carried out independently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powers. In Imjin Japanese Invasion War and the Korean War combined military forces were formed, and in these wars we were not the mainstay of the peace talks. Often negotiations proceeded in absence of our participation, and disadvantageous situations necessarily arose. The chances were always high that the allies would take conflicting positions in motives for and aims in negotiating peace. Imjin War and Byoungja War furnish vital frames of reference for the conditions for peace, the processes of war operations with the nations concerned, and also restoring normal relations with them.

Lastly, with passage of time after the occurrence of war, something that might be termed war memories develop, and with them a psychological domain of war literature. War literature personalizes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war and portrays diverse reflections upon and aspects of the war, but it may at times trigger social conflicts too. In addition to maintaining adequate peacetime preparedness for military emergencies, developing policy programs for easing the pains of the citizenry caused by war at a national level, as well as for the management of discord and the recovery of unity in war's aftermath, must be another preparedness for consideration.

Key Words : History of the Korean War, Memories of war, Imjin War, Byoungja War, Korean War